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21)

### 1.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관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sup>1)</sup>
- o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하게 검사하겠다고 발표함.
- \*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당 시험검사 1회씩 실시하였으나, 1kg당 2회씩으로 시험검사 횟수를 늘림.
- o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 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임.
- 한편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sup>2)</sup>

#### □ [일본 언론 평가]

-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반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서, 식약처의 조치 역시 이 일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日本經濟新聞(8.21)].<sup>3)</sup>
- 또한 NHK역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안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2019. 8. 21).

2) 한편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최근에는 사고 이전 수준까지 다시 증가하였음. 「韓国、輸入食品の放射線検査を強化」 『朝日新聞』 (2019. 8. 21).

3) 「日本産の放射性検査強化、韓国、食品や農産物17品目。」 『日本經濟新聞』 (2019. 8. 21).

전성을 둘러싼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논평함.<sup>4)</sup>

## 2. 수출규제 강화조치 관련 일본 내 전문가 의견<sup>5)</sup>

### □ [공급망을 통해 미치는 영향]

-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토도(戸堂康之)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들어 수출규제의 영향이 공급망을 거쳐 증폭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생산설비가 파괴됨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생산액의 감소는 GDP의 약 0.02%(약 1천억엔) 수준이었음. 그러나 공급망의 두절로 인해 일본 내 모든 지역으로 그 파급효과가 번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액의 전체 감소량은 11조엔(GDP의 약 2.3%)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약 10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두 회사는 글로벌 공급망에 복잡한 고리(루프)를 만들어내는 중추 기업임. 이들 기업에 대한 소재 수출이 막힌다면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차 공급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2차,3차 공급자도 영향을 받게 되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됨.
- 즉 이러한 영향은 반도체 공급망 내의 고리를 순환하여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토도 교수는 일본이 가령 수출관리를 더욱 강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논평함.

## 3.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관련

### □ [동향]

4) 「韓国 日本からの輸入食品 放射性物質検査を強化へ」 『NHK NEWS WEB』(2019. 8. 21).

5) 「対韓輸出管理厳格化の是非 (上) 戸堂康之・早稲田大学教授—供給網通じた波及避けよ (経済教室)」 『日本経済新聞』(2019. 8. 21).

- 국내 언론들은 21일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실시하였으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고 보도함.<sup>6)</sup>
- 한편 일본 언론매체인 NHK는 고노 일본 외무장관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반복해서 요구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간에 의사소통을 이어갈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함.<sup>7)</sup>
- 고노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문제가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문제이며 한국 측의 책임이라고 발언함. 또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고노 장관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 간 입장의) 조정은 실무 당국 간에 맡길 의향임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남(NHK).<sup>8)</sup>
- 또한 고노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민간 교류가 방해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민간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발언함.<sup>9)</sup>

---

6) 「韓日외교장관 20일만에 다시 만났지만...상황반전 조짐 없어」 『연합뉴스』 (2019. 8. 21.)

7) 「日韓外相會談 「徴用」問題解決へ 意思疎通確認」 『NHK NEWS WEB』 (2019. 8. 21).

8) 각주 7과 출처 동일

9) 「河野外相 「政府間が困難な時こそ積極的に国民どうし交流を」」 『NHK NEWS WEB』 (2019. 8. 21).